

# 흔들리는 '조-조'에 초조한 靑... 金 부산답방에 '반전기대'

〈조국·조현옥〉

〈김정은〉

野 “인사검증 담당 조·조 경질해야”  
11월25~26일 부산 특별정상회의  
“장기적인 관점서 韓 평화가 핵심  
김정은 부산 방문엔 ‘긍정’ 효과”

청와대가 이른바 ‘조국(민정수석비서관)-조현옥(인사수석비서관) 경질’ 위기를 직면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답방’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우선 조국-조현옥 경질 위기가 나온 배경은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8일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은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싸늘한 여론을 인식했을까.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대통령 지명철회’라는 불명예를



회의 중인 청와대 참모진들.

/연합뉴스

연게 됐다. 조 후보자가 지명철회를 밟자 야권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조현옥 수석비서관 경질을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조라인(조국-조

현옥)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다”며 “과거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다.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 발언에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 때 “대통령에게 조 민정수석이 설사 잘못된 게 없어도 국민을

생각해서 음참마속의 심정으로 사퇴를 시키라고 했다. 조 민정수석은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조국-조현옥 경질은 장시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사문제가 부각될수록 여권 입장에서는 악재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조 후보자를 비롯해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다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했다면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지명철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이 조국-조현옥 경질로 압박하자 청와대는 외교 현안으로 ‘국정동력 회복’에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1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는 2009년(제주도)과 2014년(부산)에 이어 3번째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초청 방안도 제기됐다. 윤 수석비서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을 초청하면 좋겠다’는 내부 논의가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과 그 부분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제안은 작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언급한 바다.

또 다른 여권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야권에서는 조조(조국-조현옥)라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하지만 큰 틀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다. 또 김 위원장이 부산에 온다면 여야 대립 등을 떠나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평일선거’ 노동자 투표여부 당락 가른다

4·3 보궐선거 D-day

이해찬·황교안, 통영·창원 유세  
손학규·이정미, 창원서 집중

4·3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각 당 지도부는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전국적으로 주목되는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은 정치권에 대한 평가와 평일 투표라는 특성이 선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통영과 창원을 전방위로 오가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창원 유세에 집중했다.

이번 창원·성산 선거 변수는 진보단일화와 평일 투표 등이 꼽힌다. 앞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 한국당이 무치기 시작했다”며 진보진영 단합을 강조했다.

다만 여 후보가 손석형 민중당 후보와는 단일화하지 못해 ‘반쪽 단일화’란 평가다. 지난 총선에서 고 노회찬 정의

당 의원은 손 후보와 단일화로 힘을 모았지만, 손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완주를 선언했고, 한국진보연대 등은 여 후보 단일화에 대해 “명분 없는 야합”이라며 손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변수다.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은 소상공인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유권자에게 읍소해왔다.

‘보궐선거 투표율’도 변수 중 하나다. 총선과 달리 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 투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표심이 강한 창원·성산 특성상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진보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통영·고성의 경우 점성식 한국당 후보 측근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변수로 꼽힌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는 최측근이란 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압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지역신문기자를 매수하려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각 정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 성산에 출마한 후보,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위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 경찰, 檢 수사권 가져올까... 검경개혁 공방

국회 정보위, 경찰청 업무보고

여야가 수사권 조정 등 검경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버닝썬 유착 의혹 등에 직면한 경찰이 검찰 수사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갑룡 경찰청장의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다만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버닝썬 유착 의혹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동영상 관련 ‘청와대 내사 사실 보고’ 의혹과 ‘버닝썬 유착’ 의혹 등에 직면했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 사실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보고했다. 또 버닝썬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윤도 총경은 가수 승리 측 인사로부터 빅뱅 콘서트 티켓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연예계 유착 의혹이 제



2일 오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된 상태다. 여러 의혹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경찰이 수사권을 쥘 경우 권력 비대화와 유착 의혹이 더욱 커질 것이라 우려도 나오지만, 정치권에서는 개인의 일탈과 시스템의 문제는 별개라는 평가다.

한 여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은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버닝썬 사건의 경우 일탈에 관한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경찰 시스템이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일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지금의 일탈 문제이지만, 계속 이런 일탈이 나온다면 시스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석대성 기자

## 상은 보관기술 개발 ‘떡’ 수출길 활짝

떡볶이 떡이나 떡국 떡의 유통기한을 상온에서 8개월까지 늘리는 기술이 개발돼 앞으로 우리 떡 수출이 멀지 않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강원대학교와 함께 쌀가공품인 떡볶이 떡의 유통기한을 냉장 1개월에서 상온 8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떡류는 수분 함량이 높은 상태에서 유통돼 효모와 곰팡이 등이 증식할 수 있어 표면 살균 처리한 뒤 진공 포장해 냉장유통을 하고 있지만 저장성이 크게 연장되지 않았다.

이번에 개발한 상온유통 연장기술은

떡볶이 떡의 제조과정 떡볶이 떡 제조 공정 단계별로 미생물 저감화 요소를 최적화한 것이다.

관련 업체들은 이번 개발된 기술로 우리나라 쌀 떡볶이의 품질 경쟁력이 확보되고, 수출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세종=최신용 기자

## 노동부, 중소기업 지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들의 근무혁신 추진 현황,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포함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근무혁신 표지(마크) 부여,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산업부, 원전 중소·협력업체 지원

안전투자 확대 로드맵 등 발표

정부가 원전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원전 안전성 강화 및 유지·보수 사업 로드맵(2019~2030)’을 수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원전기업지원센터에서 원전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전 산업계의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한수원 등 원전 공급업체들은 원전 중소·협력업체들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들의 일감확보 및 예측 가능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동원전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라 한수원은

2030년까지 약 1조7000억원 이상의 설비보강, 예비품 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내·외 인증 취득·유지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한수원 납품과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내·외 인증의 취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보조기와 예비품 등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중국, 러시아 등의 해외인증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해체사업 세부공정 공개 및 해체전문기업 확인·추천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